

“시니어 의사 우리마을 와주오” 농촌보건소 애타는 채용 작전

신안·해남·영암·진도군 등
공모 선정에 응시자 찾기 나서
내달초까지 못구하면 지원금 반환
교통·급여 등 열악, 지원자 없어
인맥 동원 수소문 구인 총력전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전남 각 지자체 보건소가 ‘시니어 의사’ 구하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해 선정됐지만, 열악한 근로 조건 등으로 자원하는 시니어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온갖 인맥을 총동원해 ‘노장 의사’ 구하기에 나섰다. 자칫 오는 8월 8일까지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지 몰라 보건소 직원들은 각 지역 의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과 시·군청 등 곳곳에 ‘SOS’를 요청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6개 자치단체의 ‘노장 의사’ 구하기 작전은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다.

앞서, 복지부는 강진의료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영암·해남·진도·신안군의 경우 지자체 보건소를 선정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60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 전문의를 채용하면 월 1100만원(전일), 월 400만원(시간제) 등 채용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강진의료원과 구례군보건의료원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영상의학과와 산부인과 시니어의사를 재고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채용’을 수월하게 처리했다.

문제는 나머지 4개 지자체 보건소들, 한 달 가까이 응시자를 찾지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영암군보건소는 지난달 10일 사업 선정과 동시에 시니어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여태껏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받지 못했다. 영암군보건소는 전일제도 아니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주 3일 파트타임(2명) 시간제 방식으로 사업에 공모했지만 소용없어 속을 태우고 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닥터링크’ 등 시니어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뿐 아니라 영암군청 홈페이지 등 각종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는데도 반응이 없다”며 “전남권 근무를 희망한다고 밝힌 적 있는 의사들을 수소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강진의료원 영상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다. <강진의료원 제공>

문해 메일을 보내며 접촉하고 있지만 답신조차 받지 못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진도군보건소도 비슷하다. 군 홈페이지와 ‘닥터링크’에 공고를 올리고 오는 4일까지 지원자를 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0명’이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주변에 지원을 해보라고 물어볼 인맥조차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진도군보건소측은 “재공고 등 할 수 있는 데까지 시도해보고 정 어려우면 주변 병원 의사들에게 채용 추천을 의뢰해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받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인맥을 통해서라도 구하면 좋겠지만, 신안이 도심과 멀고 수도권에 의사 인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문의한 의사도 없고 지원도 없어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대한 협회에 홍보를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해남군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1일 보건소 홈페이지에 전일제 전문의의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21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응시자는 없다.

해남군보건소 관계자는 “자마 주변에 부담이 될까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추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으면 어쩌어야 할지 고민”이라며 “남은 기간 모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역 보건소에 시니어 의사가 단 한명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전남 의료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으로 가면 월 200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시골에서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교통, 생활 등 인프라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셔와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지역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등 지역 의료 대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이 도심에 비해 교통도 불편하고 급여 차이도 크다보니, 수도권처럼 시니어의사 사업도 쉽게 활성화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건소 차원에서는 그저 많이들 지원해 주길 바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뒷차가 경운기 “황”…보성서 80대 2명 숨져

무안·광양 등 농번기 전남 경운기 사망사고 잇따라

여름철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전남지역에서 경운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께 보성군 미력면의 한 국도 1차로에서 경차(모닝)를 운전하던 A(여·57)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88)씨와 동승자 C(여·87)씨가 도로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발길을 하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확인하

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무안군 해제면 한 농로에서는 경운기를 몰던 80대가 급경사 지형에서 중심을 잃고 농로 5m 아래로 추락,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지난달 18일에는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의 한 자택 마당에서 시동 걸린 경운기를 손으로 끌던 70대 자 전도된 경운기에 깔려 사망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도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공공운수·금속노조 결의대회 추진

광주지역 노동자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다.

2일 민주노총 광주지부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 및 결의대회를 추진 중으로, 공공운수노조는 17일부터 19일까지 비정규직 단위 중심의 파업 및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지역자치단체 공무직 노조도 결의대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도 오는 16일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지부, 위니아대우지부 등이 나서 고용 불안 문제 등을 지역 주요 현안으로 삼고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안전운임제 복원 등을 내걸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내란특검, 尹 최측근 수행실장 소환 조사

한덕수 전 총리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강릉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에게 “대통령이 총리,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행안부 장관을 부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한 인물이다.

강 전 실장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후 ‘대통령이 추가로 더 부르라고 한다’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받아적어 와 함께 연락을 돌렸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이 강 전 실장에게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속수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는 말도 전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등 특수부 수사관으로 오래 활동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검찰 사직 후 대통령실로 옮긴 그는 윤 전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인 데 대해서는 “구

체적인 조사 내용과 신분은 말할 수 없지만 국무위원 권한이나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피해자이자 동시에 내란 혐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관련 질의에는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의 대질신문을 시도하지 않았고 심야 조사 동의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조사자 신분과 관련해선 “(경찰 단계의) 피의자 신분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지만 참고인인 사안은 참고인 조사를, 피의자인 사안은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팀의 별도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진 경우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큰 사정 변경이 없으면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가 수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